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

모 두 발 언

2024. 3. 29.(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업권이 합동으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오늘 회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과,
금융업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현황과 진단

최근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이자환급, 서민금융·고용·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신용사면 등 다양한 민생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서민·취약계층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더해, 나날이 범죄수법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고,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특정인의 가짜 동영상·뉴스 등을 제작·편집하는 수법

천문학적 고금리와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을 동반하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도 여전합니다.

Ⅲ. 대응방향

이러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금융권에서는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융권의 자금공급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22년 9.8조 → '23년 10.7조(잠정)

특히,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민들께서
‘모르고’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종수법 등에 대한 유의사항과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 나가고,

불법금융투자사기, 보이스피싱 광고 등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단속, 처벌강화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활성화하는 한편,
역대 최대예산을 확보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월)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IV. 맺음말

여러분,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하여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부, 관계기관, 금융권이
모두 모인 만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